

‘조국 정국 2라운드’...“檢개혁” vs “협사퇴”

輿, 사법개혁 드라이브로 국면 전환... 정치공세 차단 주력

한국·바른미래, 공조 본격화... 해임안·국조 추진 합의

‘협사퇴’ 요구했던 평화당·대안정치, 보수野와 공조 선긋기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여야간 대립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계 제로의 ‘포스트 조국 임명’ 정국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조 장관 임명을 계기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면전환에 돌입한 반면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야권 공조에 합의하는 등 총공세에 나서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보수 야당의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주장을 정치공세라고 몰아붙였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의혹 공세로 낙마 시도를 한 데 이어 임명 직후에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의도 자체가 정략적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장관 부인을 기소하는 등 강도 높게 수사하는 상황에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언급하는 것도 부적절한 입장도 보이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임명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장관을 풀 평가해 해임건의안을 만지작거리느냐”며 “뭐가 못 미더워서 벌써 국조, 특검을 운운하나. 모순이고 이율배반”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계속 가는 동시에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도 늦추지 않고 있다. 검찰이 피의사실 유출 등을 통해 조 장관 흔들기를 시도할 경우 ‘조국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법 개혁 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면 조 장관 임명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수습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

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조국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를 공동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히 ‘조국 임명’에 반대했던 국회 내 세력들을 해임건의안으로 묶어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임건의안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도 추진도 함께하기로 했다”며 “다만 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

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는 특검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장외 여론전에도 돌입, 조 장관 임명에 반대했던 정치세력의 연대를 모색하면서 여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려면 결국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아래 모든 세력이 함께 일어서야 한다”면서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 연대”를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찾아 협조 요청을 했다. 손 대표도 추석 전날인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조국 임명 철회 촉구’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이른바 ‘반문반조(反文反曹) 연대’ 제안에 민주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적극 호응하지 않았다.

조 장관 임명에는 반대하지만 후속 대응 공조에는 선긋기를 한 것이다. 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국정조사라면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가 있지만, 해임건의안은 정치공세”라면서 “관심없다”고 말했다.

대안정치 유승엽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조 장관의 임명을 비판하면서도 “해임건의안은 실효성 없고, 국조와 특검은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에 미진하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미 조 장관 임명에 적극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국무회의의 참석한 조국 법무부장관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주 SRF 갈등 해소 실무협의 진전 없어

연료 사용 승인 기간 제한 이견 이달말 거버넌스 재논의키로

9일 나주 고흥폐기물(SRF) 열병합 발전소 시험가동을 위한 민관 이해당사자 실무협의가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렸지만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 실무협의에서는 시민단체 대표인 범시민대책위가 제기해 거버넌스의 새 쟁점으로 부상한 발전소 연료 사용 승인 기간 제한 요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범대위 측은 나주시의 SRF 연료 사용 승인이 시험가동 후에도 법적 효력을 가져 난방공사가 발전소를 계속 가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는 이에 대해 연료사용 승인을 시험가동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정하는 것을 합의서에 추가하는 것은 향후 법적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김지은 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용섭 시장, 민간공원 사업 비리의혹 압수수색 사과

이용섭 광주시장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의혹 관련 검찰의 시정 압수수색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했다. 검찰 수사로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라는 한편 민간공원 특례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시장은 10일 “지난 5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과 관련해 시정 일부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 시정의 책임자로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우리시는 지난해 11월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심사과정의 공정성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며 “저는 11월 1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만약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감사결과 지난 해 12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2개 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했고, 저는 12월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부실평가 책임자에 대한 일벌백계를 지시했다”며 “이후 관련자에 대한 징계 조치(중징계인 정직 2명, 경징계인견책 7명)를 취하는 등 진상규명과 문책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영록지사 그리스서 1200억원 규모 선박 2척 수주

유럽을 순방 중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9일(현지 시각) 그리스에서 대한조선과 함께 아프리카급 탱커선박 2척 수주 계약을 맺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기업과 함께 해외시장 개척에 성공한 것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9일 오전 게오르기오스 파풀리스 아티키주지사 등 400여명의 섬이 있어 관광산업이 매우 발달했다. 김 지사는 이어 순방에 동행한 박용덕 대한조선 사장과 함께 그리스 대형 선사 대표를 만나 탱커선박 아프리카급(11만5000t) 2척 수주계약을 체결했다. 가격은 적당 5000만 달러, 총 1억 달러 규모다. 한화로는 1200억원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北, 10번째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

내륙횡단 최대 330km 비행 靑 “강한 우려” 표명

북한은 10일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이 발사체는 서쪽 내륙에서 동해 쪽으로 내륙횡단 방식으로 발사되어 최근 공개된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무기체계의 정확도와 유도가능·비행성능 등을 최종 시험하는 성격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미국에 대화 의의를 표명한 지 10시간도 안 돼 이뤄진 이번 무력시위는 미국에 전략적

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정권 수립일(9·9절)을 계기로 ‘군사강국’을 과시하며 체제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53분경, 오전 7시 12분경 북한이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km로 탐지됐다. 정점고도 50~60km로, 개천에서 동북방 직선 방향으로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미 군당국은 이 발사체의 정점 고도와 비행속도, 요격

회피 가능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면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추가 발사할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 대북 감시를 계속 강화할 방침이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쏜 건 지난달 24일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단거리 탄도미사일급)를 발사한 지 17일 만이다. 올해 전체로 범위를 넓혀서 10번째다. 지금까지 모두 20발을 쏘았다.

아직 이번 발사체의 기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직경 600mm로 추정되는 ‘초대형 방사포’ 또는



지난 7월 이후 잇따라 발사한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연합뉴스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사채 정리 운동 실시 기간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